

정병석의 경제멘토링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은 참 모호한 표현이다. 경제와 정치는 엄연히 운용원리가 다른데 정치형태를 규정하는 민주라는 개념을 경제와 묶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것이다. 모든 시민이 동등한 정치 권리를 행사하는 즉, ‘1인 1표제’를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꼭 친한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대부분의 국가가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본 원리가 꼭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자본가는 ‘1인 1표제’보다는 ‘1달러 1표제’를 선호한다. 민주주의의 원리로 다수가 원한다고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매기거나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제도 만드는 것을 선호할 리가 없다. 그 보다 돈을 많이 가진 자본가들(인원은 적어도)의 경제활동에 최대한 허용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나 폴 크루그먼은 지금 미국이 1달러 1표제 식으로 부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운영되어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급격히 확대되는 소득 불평등의 확대가 주로 정치적 결정의 결과라는 것이다. 스티글리츠는 최근 발간된 ‘불평등의 대가’라는 저서에서 시장 질서가 정치에 의해 규정되는데 규적이 주로 상위 1%의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는 행태를

비판한다. 지난해 총선·대선을 계기로 촉발된 경제 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의 범위, 근거, 구체적인 정책 등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역사적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민주화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근거가 분명하다. 헌법 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자유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 국가가 적절한 규제와 조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 즉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라는 규정의 구체적인 해석과 범위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경제적 민주주의는 20세기 유럽 사회 민주주의 운동 이념의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회운동으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작년 10월에도 미국의 위스콘신에서 많은 학자와 사회운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학술대회와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목표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정치적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려면, 경제적 민주주의의 목표는 모든 시민에게 경제적 권력을 나누어 주어 경제력의 집중으로 인하여 다수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30년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경제학자 발터 오이켄 등 일련의 학자들은 히틀러 치하의 전체주의 통제경제가 개인의 자유를 말살한다는 비판의식에서 이를 대체할 경제체제를 구상하게 된다. 히틀러의 과도한 국가 개입 통제에 대한 반동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는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정립한다. 국가는 시장 경제 질서의 기본인 거래규칙을 제정해서 운용할 뿐 시장경제의 운용과정에는 일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경제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국가의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하는 질서 자유주의가 태동한다. 2차 대전 후에 서독에서는 자유시장 경제가 초래하는 불공평의 문제에도 초점을 맞춰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노사공동결정 이념을 질서 자유주의 원리에 보완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는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서독의 경제성장과 복지증진을 가져온다.

19세기 중엽 영국에서는 산업혁명과 자유 시장경제의 후유증으로 빈곤층이 늘어나고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의 사회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사상가들이 자유주의 이론을 수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한다. 존 스튜어트 밀이나 토마스 홉스 그린 등이 중심이 되어 개인의 적극적인 자유 실현을 보장하려면 국가가 기초교육, 보건, 주거 등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한다고 수정한 자유주의 사상을 ‘사회적 자유주의’ 또는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부른다.

미국에서는 1879년에 헨리 조지라는 저널리스트가 ‘진보와 빈곤’이라는 저서를 발간하여 사회 여론을 조성한다. 그는 자본주의의 부작용, 즉 부의 불평등과 빈곤의 원인이 불합리한 토지 소유제도에 있음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토지의 사적 소유를 공동소유로 바꾸고 지대를 모두 세금으로 징수하자는 토지가치세를 제안한다. 이러한 이념은 영국과 미국의 경제 사회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민주화에 기여해온 여러 논의들을 살펴 보았는데 지나치게 세부 사항에, 또 온갖 이슈에 이를 적용하여 초점을 흐트리는 것보다 소득 양극화와 공정거래 질서라는 우리의 핵심 이슈에 맞춰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큰 틀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찾는 기준으로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종교칼럼

같은 생명들



도 권 보각사 주지 스님

에서는 배변을 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줄을 풀어주면 수풀 속에서 일을 보았다. 내가 대구에 나간 사이 공양주 보살님이 일을 보라고 줄을 풀어준 모양이었다. 그런데 ‘왕왕’ 짓던 삼사리가 줄을 풀자마자 절해우소 뒤로 손살같이 가버렸다. 이때 다리를 다친 고라니가 삼사리에게 물려 절 앞 노으로 곶을 피했다. 사냥 본능이 발동된 삼사리는 고라니의 목을 물고, 공양주 보살님이 아무리 소리쳐도 놓지 않았다. 이때 근처를 지나던 사하촌 마을사람이 끈으로 고라니의 목을 매어 절 앞 가로수 지지대에 묶었다. 내가 절에 들어온 때가 그때였다. 삼사리는 여전히 흥분하고 있었다. 예부터 절 아랫마을(사하촌) 주민들과 절사이는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다. 절은 경작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경작지를 지키려는 절과 그것을 탐내는 사하촌 주민들과는 소소한 마찰이 그치지 않았다.

당시 인각사 아랫마을 주민들 사이에 절 소유지 경작권을 놓고 반목이 심하였던 터라 주민들에게는 될 수 있으면 공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할 수 있으면 절 아랫마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지역발전문제 등이 제기되면 해당 관청에 여러 가지 청원을 넣기도 했다. 어쨌든 공양주 보살님의 이야기를 듣고 묵인 고라니를 보러 갔다. 고라니의 왼 뒷발에 뼈가 튀어나왔고, 도망치려고 손구치다가 밧줄에 걸박되어 땅에 ‘똥’ 떨어졌다. 순간 눈물이 ‘왕왕’ 쏟아질 뻔했다. 그런데 고라니를 붙잡은 마을사람이 허리가 아파 고라니를 고아 먹었다고 했다. 그 무자비한 말에 화가 솟구쳤다. “허기받지 않고 야생동물은 포획하면 불법입니다. 처벌받습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냉정하게 말을 내뱉었다. 그러자 마을사람은 개가 고라니를 잡았다고, 불법을 저지른 것은 개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는

아부소리 않고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다. 이윽고 경찰이 오고,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오고, 어쨌든 고라니는 구호를 받았다. 그러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왜 그때 마음속에 화를 내고 그 마을 사람에게 불법 운운하며 딱딱 울러왔는지... 고라니를 잡아먹는다는 말에 화를 내기 보다는 자신을 한번 더 추슬러 “고라니 다리를 치료받게 해 살려 줍시다”라고 그 사람을 달라고 설득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사바세계를 건다다 보면 그 누군들 한번쯤 마음속에 독기를 품지 않으려만 만든 그 독기를 뱉어내기보다는 마음속에 한번 더 추슬러 자비와 사랑으로 변환하여 “같은 생명들 지닌 거 거여운 짐승을 살려줍시다”가 더 좋지 않았을까? 마음속에 불현듯 지피는 성깔을 한번쯤 녹이며 같이 숨 쉬는 생명들을 돌아 볼 여유가 필요할 게다.

기고

시청광장 스케이트장, 시민 놀이공간으로



박형렬 광주시 빙상경기연맹 회장

있다. 이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3억원(설치비 2억원, 운영비 1억원)을 편성,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현재 야외 스케이트장을 보유·운영 중에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시청광장과 올림픽공원 스케이트장, 그 외 성남시, 천안시 등 10여 곳에 이르며, 주로 지자체 또는 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성남시, 안산시의 경우 2년전 개장을 했다. 다른 시도에서도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을 반기면서, 최근 지자체별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시민을 위한 겨울철 놀이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야외 스케이트장은 실내 시설보다 많은 이점이 있다. 우선 사방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나 청소년들의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가족 단위의 이용객들에게는 도심 속의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시청 광장에 설치되는 만큼 입장료(대여료)가 저렴해 시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야외 시설의 메리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광장 주변 유희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성탄절·연말연시 등 겨울철만의 특색을 살린 행사로 김연아 선수 등 유명 빙상인을 초청해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 활용 가치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의 목소리도 있다. 광주의 특성상 겨울철 평균 온도가 타지역보다 섭씨 2도가량 높아 빙질(氷質)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현재 광주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실내 빙상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와는 달리 광주보다 평균 온도가 높은 대구는 이미 4년 전부터 야외 스케이트장을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래서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의 수의 목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민 친화사업의 일환으로 시민 건강증진 및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여가활동 등의 문화 콘텐츠로서 묶을 다하면 그 자체가 매우 가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겨울철 야외에서 스케이트를 접한 시민들은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빙상장

을 찾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실내빙상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제는 민·관이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잘 풀어나가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운영 주체인 공공기관에서는 시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이용하는 시민들은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육시설물을 애용해야 할 것이다.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거나 피해가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되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계획수립과 기관 간 원활한 협조를 통해 성공적인 개장이 될 수 있도록 빙상인들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하여 야외에서 흥미를 느끼는 시민들이 실내 빙상장에서도 활발하게 스케이팅을 즐기므로 빙상인구의 저변확대를 기대해 본다. 겨울 시청광장 야외 스케이트장에서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겁고 근한 스케이팅을 만끽했으면 한다.

社說

국립광주과학관 개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호남 유일의 국립광주과학관이 완공된 지 7개월이 넘도록 개관을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연간 45억원으로 추정되는 운영비 부담을 놓고 광주시와 정부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매월 시설 유지비로 7000여만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립광주과학관은 북구 오동동 첨단 과학산업단지내 9만8248㎡부지에 848억원(국비 594억원·시비 254억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완공됐다. 56개 주제 150여개의 최첨단 과학전시물이 배치돼 호남 지역 과학 꿈나무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광주시는 국립 시설인 점을 들어 전액 국비를 요구한 반면 정부는 지난 2008년 협약 내용에 따라 운영비의 4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개관이 미뤄지고 있다. 사실 광주시가 전액 국비 부담을 요구한 것은 100% 국비로 운영되는 과천

과 대전 국립과학관과의 형평성 때문이었다. 그런데 광주와 함께 과학관을 건립한 대구시와 2015년 과학관 완공을 앞둔 부산시가 최근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광주시만 버티는 형국이 돼버렸다. 기특이나 어려운 지자체 살림을 감안하면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광주시의 입장을 심분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고 마냥 버티기만을 할 수는 없다. 지역의 여론도 빠른 시일 내 타협점을 찾아 여류법도 전에 개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살리려는 기싸움은 이제 끝내야한다. 대화로 푸는 것이 순리다. 정부당국과 광주시는 조속히 협상타이틀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도 광주시의 협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정부도 기존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소외지역 배려차원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 과학관 개관을 손꼽아 기다리는 지역 과학 꿈나무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안겨주어서는 안된다.

‘전두환 추징법’ 제정 새누리당이 나서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조세과난적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두환씨의 비자금 징수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법’을 제정해 비자금을 환수 하자는 여론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전두환 추징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 전·현직 최고위 공무원이 법규를 악용해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 범죄의 몰수·추징 제도를 개선 하자는 게 골자다. 이 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가 가능해진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 탈세 의혹이 농후한 유령회사를 세웠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전두환이 군사독재시절 기업인들을 협박해 강제로 빼앗은 수천억 원의 불법자금이 그 일가에게 넘겨졌을 개연성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이제 국회 가 나서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5·18 광주 학살의 장본인인 전두환은 16년 전 대법원에서부터 내란죄와 반란죄,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당한 반역사적 범죄자다. 그는 또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으면서 추징금 1672억 원을 지금 까지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파렴치한이기도 하다. 호화생활에, 그 자녀의 재산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데도 정치권이 방관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정의는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오는 10월10일까지 전세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받아낼 방법이 없다. ‘전두환 추징법’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 다수당이 새누리당이 나서면 제정은 어렵지 않다. 새누리당이 이를 외면하려 든다면 그들이 5공 후신의 뿌리가 아니냐는 의구심만 기울 뿐이다. 더 이상 전직 대통령 일가가 검은 돈을 대탈탈하며 호의호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無 等 鼓

사건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 초년병 시절, 가장 어렵고 난감한 취재가운데 하나가 사건 현장이나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을 만나는 것이다. 슬픔에 젖어있는 유가족을 상대로 사망 경위와 사망한 사람의 생전 주변 인물과의 관계 등을 취재하는 것은 쉽지않은 일이다. 특히 자살사건의 경우 사망자가 어떤 이유로 죽음을 선택했는지를 묻는 것은

의 아픈 곳을 또 들추시느냐”며 곤욕을 치른 적이 비일비재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200건이 넘는 유가족 인터뷰를 시도해 40여건의 심리적 부검에 성공했다. 심리적 부검이란 신체적 부검과 달리 유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유사 등을 통해 그 사람이 자살에 이른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다. 일정사례 이상을 조사해 통계화 할 경우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심리적 부검



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핀란드는 1987년 세계 최초로 국가적 차원에서 심리적 부검제도를 도입, 당시 인구 10만명당 30.3명이던 자살률을 23만만인 지난해 17.3명으로 절반가량 줄였다. 보건복지부가 아주대 발생하면 신문지상에 사망자들의 얼굴을 신년 시절이다. 유가족에게 사진을 달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아 사진점에서 몰래 사망자의 사진을 훔쳐(?) 사용하고 되돌려 주는 일도 있었다. 유가족을 인터뷰하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힘든 일인듯 같다. 심리적 부검 분야에 대한 연구원은 유가족들로부터 “왜 남

하물며 사망자들의 얼굴 사진을 구하기 위해 기자들끼리 경쟁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2~3명이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신문지상에 사망자들의 얼굴을 신년 시절이다. 유가족에게 사진을 달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아 사진점에서 몰래 사망자의 사진을 훔쳐(?) 사용하고 되돌려 주는 일도 있었다. 유가족을 인터뷰하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힘든 일인듯 같다. 심리적 부검 분야에 대한 연구원은 유가족들로부터 “왜 남

척추 전문병원 과잉수술 없도록 점검 필요

며칠 전 고향에 내려가 일을 하다 허리를 삐끗했다. 광주에 올라와 서둘러서 시내 유명하다는 척추 전문병원에서 갔더니 수술해야 한다는 처방이 나왔다. 지금까지 아들 때마다 물리치료를 받고 적절히 운동해서 잘 넘겨왔는데 이 병원에서는 느닷없이 수술을 하라니 좀 두려운 느낌이 들어 일단 물리치료부터 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수술이 최선이라며 물리치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일단 퇴원한 뒤 집에서 가꾸워 평소와 자주 다니던 외과 전문병원에 가서 사정을 말했다더니 굳이 수술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선생님은 물리치료나 운동 요법으로 호전될 수 있는 상태인데 수술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 자기를 믿고 물리치료부터 잘 받자고 알려줬다. 일단 집에서 오가며 물리치료를 시작했다. 허리 자극과 찢질 패 치료와 몸통 견인까지 3단계로 나눠서 2주일 정도 치료를 했

더니 정말 좋아졌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고 해서 다 디스크 환자로 판정받아 수술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다. 수술 후 후유증 환자가 아주 많고,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는 얘기가었다. 내가 처음 허리를 다쳐서 누워있을 때도 이웃집 아줌마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대면 알만한 유명 척추 전문병원 몇 군데를 알려줬는데 대부분이 수술 전문 병원이었다. 심지어 수술 당일 걸려 나올 수 있는 수술이라는 등, 레이저로 손쉽게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라는 선전까지 들었다. 병원의사

보다 일반인들이 더 잘 알 정도의 유명한 척추 전문병원들은 대부분 수술을 위주로 하는듯한데 허리가 조금 아프다고 갈부터 대는 게 옳은 일은 아니라고 한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척추 수술은 6개월 이상 치료해도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다리에 마비증상이 생길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물론 병원에서 잘 알아서 처방을 해주기는 하겠지만 혹시나 우리나라 척추 전문병원들이 과잉 수술을 하는 건 아닌지, 의료당국에서 적절한 점검이 있어야할 듯 하다. ▲최중훈·광주시 남구 원성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1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지구별로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